

전문지 NEWS 클리핑



◎ “이번 HPAI 인체 무해...상시방역체계 갖춰야”

서울대 김재홍 교수 ‘HPAI 대응’ 토론회서
주장

인체감염 사례 없어...가금류 소비 외면은 ‘기우’

“고병원성은 닭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 인체
에 대한 고병원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대 수의대 김재홍 교수는 지난 4일 한국
과학기술한림원 회관에서 열린 ‘고병원성 AI의
국내외 발생양상과 우리의 대응방안’ 원탁토론회
에서 “올해 고병원성 AI를 일으킨 바이러스
(유전자형 2.3.2)는 기록으로 볼 때 현재로서는 인
체감염 사례가 없는 게 확실하다”며 지나친 우
려로 인해 가금류 소비를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인체 감염 위험성이 있는 AI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도 정상적 유통체계를 거친 닭고
기나 오리고기, 계란 등을 먹고 감염된 사례는
없다”며 “이러한 가금 요리의 안전성은 국제보
건기구(WHO)나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문제가 없음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AI 방역대책을 겨울철 특별방
역에서 연중 상시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그는 “올해 봄철 AI 발생 예에서 보듯
우리나라도 연중 발생 위험성이 상존해 있는 게
현실이다. 상시방역을 위해 조기 검색체계 및
초기대응체계 확립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역조직 일원화 및 진단기능
의 지방 방역기관 분산, 닭 및 오리 도축장 검사
제도 공영화 등을 제안했다.

이번 AI 발생에 대해서는 “소규모 중간 판매
상인을 통해 재래시장의 조류매매 시장으로 전

파됨으로써 전국적인 확산을 초래했다. 감염경로를 적극 차단한 이후 현재 통제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 초여름의 기온을 감안할 때 환경에 일부 바이러스가 오염돼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조기에 사멸될 것으로 추측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감시망을 벗어난 상태에서 감염동물이 있거나 유통된다면 또 다른 확산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방역당국에서는 더욱 철저한 감시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길기자 (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 / 2008년 6월 9일

◎ 검역원, 소 모기 매개 3종 바이러스 예방 혼합백신 특허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달 26일 소 모기 매개 3종 바이러스 질병 불활화 백신에 대해 특허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명은 소 모기 매개 바이러스성 질병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국내에서 분리한 아까바네, 추잔, 아이노바이러스를 이용한 3종 불활화 혼합 예방약과 그 생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번식장에 관련 소 모기 매개 바이러스성 질병에는 아까바네병, 아이노바이러스 감염증, 추잔병 등이 있다. 이러한 모기매개 질병들은 지역별로 발생률이 차이를 보이며 해마다 산발적으로 발생해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까바네 사독 또는 생백신이 단일 백신으로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지만 아까바네 질병 뿐만 아니라 추잔, 아이노바이러스까지 모두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은 없는 실정이다.

기온 상승으로 모기출현 시기가 빨라지고, 모기 활동 기간도 길어진 만큼 3가지 바이러스를 한 가지 예방약으로 막아냄으로써 한우, 육우, 유우 등을 키우는 양축 농가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 / 2008년 6월 9일

◎ 동물약품 북한에 무상지원

동물약품협회 회원사 2700만원 상당

국내 동물용의약품이 북한 개성에 무상지원 돼 통일을 위한 남북교역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내 18개 동물약품업체는 33품목 2760여만원 상당의 동물용의약품을 북한 개성시 봉동읍 송도리에 위치한 협동농장에 무상으로 지원했다.

업체 자체적으로 북한에 지원된 사례는 있지만 동물약품협회를 통해 공동으로 지원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통일농수산사업단과 동물약품협회 관계자들이 북한을 직접 방문해 약품을 전달했다.

동물약품이 지원되는 개성의 협동농장은 돼

지 5만두, 소 1500두 규모이며 50개소의 축산 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무상지원에 참가한 18개 업체는 고려비엔피, 녹십자수의약품, 대한뉴팜, 동진 BLS, 삼양애니팜, 삼우메디안, 서울신약, 신일 바이오젠, 씨티씨바이오, 우진비앤지, 유니바이오테크, 이글벳, 이화팜텍, 제일바이오, 참신약품, 케미텍인터내셔널, 코미팜, 한동 등이다.

박정완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 / 2008년 5월 30일

◎ 소비자단체 회원 초청 홍보 교육

HACCP기준원, 육가공·사료업체 견학 안내
축산물HACCP기준원(원장 곽형근)은 지난달 20~21까지 양일간 소비자단체협의회 7개 회원 단체와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들을 초청, HACCP 홍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홍보 교육에서는 안양축산농협축산물유통사업장(식육포장처리업), 세양주식회사(알가공업), (주)새아침(식육가공업), (주)카길애그리퓨리나 송탄공장(사료) 및 매일유업주식회사 평택공장(유가공업)등의 견학을 통해 HACCP도입 과정 및 도입 후 효과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단체의 호응을 얻었다.

박정완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 / 2008년 5월 30일

◎ “동약 수출 활성화 위해 제도개선 필수”

전문가들 심포지엄서 외국 실사 합격 중요성도 강조

국내 동물약품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KVGMP(우수동물약품제조·품질·관리에 대한 국내기준)의 개선은 물론 외국 실사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2일 서울대 수의과대학 스코필드홀에서 열린 ‘동물용의약품의 GMP 관리와 발전 방향’ 주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관련 전문가들은 한국의 동물약품 산업이 수출 지향적인 동물용의약품산업 구축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 실사단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 GMP와의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특히 (주)이글벳 안동원 해외사업팀장은 외국기관의 GMP 실사에 대한 동물약품업체의 ‘KVGMP와 국제적 기준의 차이’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경험 및 정보의 부재, 실사대처능력부족, 재투자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동남아와 아프리카의 실사 체험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해 주목을 받았다.

안동원 차장은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후진국이라 생각했던 동남아 및 아프리카 등의 실사에서도 국내 다수의 업체들이 합격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국제적 기준에 맞는 KVGMP의 개선이 시급함은 물론 검역원과 업

체들이 실사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완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 / 2008년 5월 30일

◎ 도축장 구조조정 발빠른 행보

위생처리협회, 이사회 통해 구체적 추진 논의

도축장구조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가 설립되는 등 바빠진 행보가 진행되고 있다.

축산물위생처리협회는 5월 28일 협회 사무실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 설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 설립을 위해 정관(안)을 마련하고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 등을 6월 10일경 총회를 개최해 결정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축산물의 경쟁은 도축장의 경쟁력에 의해 좌우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안전축산물의 생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축장 구조조정법안의 주요 내용은 도축장 경영자이 분담금 조성과 폐업 지원, 구조조정과 분담금 조성을 담당할 협의회 설립, 폐업 경영자는 동일 장소에서 10년간 재 영업금지,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등이다.

한편, 위생처리협회는 이번 법안의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준 이강두 의원 등에게 감사

의 뜻을 전달했다.

곽동신기자(a1@livesnews.com)
라이브뉴스 / 2008년 5월 29일

◎ 가축유통상인 등록제 ‘실효 의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견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질병 전파의 매개체로 주목하고 있는 가축·계란 유통상인 및 수송차량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키로 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계란과 닭의 유통 특성상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대다수로 이들이 등록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음성적인 거래를 부추길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가금업계는 감염된 닭이 유통업자들에 의해 전국으로 옮겨지면서 AI가 확산됐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전북 김제에서 전북 전역으로 확산될 때는 물론 경북 지역의 AI 확산에도 유통업자가 재래시장에 닭을 판매하면서 피해가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유통업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게 형성되고 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부재한 것이 문제다.

특히 정부가 수송차량의 등록제를 실시할 경우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을 경우 제도에 참여할 유통업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회의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등록제 미참여 유통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경

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북지역의 닭고기 유통업자는 “유통업자의 수와 동선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서 이를 파악하기란 쉽지가 않고 정부의 방침대로 등록제를 추진한다면 더욱 음성적으로 거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유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유통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국 단위의 유통업 실태 조사가 힘들다면 지역별 유통업자의 실태를 파악해 타 지역의 이동에 한해 서라도 방역당국에 신고를 하는 방식 등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닭고기 계열업체 관계자는 “일부 몰지각한 유통업자들로 인해 위생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가금산물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유통망 구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V수**

김영민기자(kimym@agrinet.co.kr)
한국농어민신문 / 2008년 5월 15일

